



충남논단 2

충청남도 도정혁신의 방향과 과제 - '창의와 도전의 실천행정'의 관점 -

최병학 | 충남발전연구원 자치정책연구부장

I. 서 언

민선4기 충남도정의 출범으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이라는 도정기치를 내걸고 보다 역동적인 도정을 펼치기에 분주하다. 이제 충남도정은 '창의와 도전의 실천행정'을 모토로 모든 구성원들의 의식의 변화와 함께 시스템의 변화를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무실역행(務實力行)을 통해 우리에게 부여된 엄중한 시대적 과업 완수에 헌신적으로 매진해야 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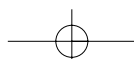
기존의 지방정부는 상대적으로 심한 중앙의존적 태도를 보여오면서, 지방분권화 추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차립형' 지방자치 실현하기 위해 여러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사실 작은 정부가 곧 힘없는 정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작지만 강한 지방정부'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근간 'Energetic Government'를 논의하는 경우도 참고할 수 있다.

여기서 민선4기 충남도정에서 표방하고자 하는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속에 담고 있는 의미와 이것이 주는 시사점을 깊이 있게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필자b, 2006. 8: 25-29).

첫째는 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이어야만 하는가 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오랫동안 '유약한(弱體) 충남'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던 소이연(所以然)과 함께 다른 또 하나는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이 될 수 있는 좋은 내 외의 기회요인들이다. 이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충청남도의 긴요한 역할 수행에 걸맞는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는 어떻게 하면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이다. 이는 '창의와 도전의 실천행정'으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합리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라 할 수 있다.

어떻든 이들은 정신적 측면과 물질적 측면을 모두 포괄해야만 하고, 특히 도민(충청인)의 기질·정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태도, 그리고 도정운영방식 등의 몇 가지 핵심요체를 과감히 변





충청남도 도정혁신의 방향과 과제

경시킬 것을 요구한다.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건설을 위한 선택의 방향이란, 충남이 반드시 한국과 세계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확신과 비전에 비추어 앞으로 이를 희망적으로 선택해야 할 좌표일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창의'와 '도전'을 토대로 '실천행정'에 입각하여 민선4기 충남도정 운영에 정념(情念)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 요청된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구현을 위한 민선4기 도정혁신방향을 민선4기 도정여건의 변화와 대응, '창의와 도전의 실천행정', 그리고 주요 도정혁신 과제라는 몇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는 전체적인 민선4기 도정운영과 관련하여 논구한 관계로 구체적인 도정혁신방법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상의 한계는 조만간 수정, 보완할 것이다.¹⁾

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이 되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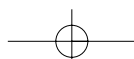
어떻게 하면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이 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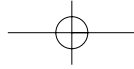
- ❖ 그동안 '유약한(弱體) 충남'으로 비춰졌던(평가되었던) 까닭
- ❖ 앞으로 전개될 우호적, 도전적 내외 기회요인에 대한 고려

- ❖ '창의와 도전의 실천행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정혁신
- ❖ 합리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능동적 대응역량 확보

〈그림 1〉 민선4기 도정혁신방향 - 문제의식

1) 충남도정의 정책적 필요라는 연구주제의 성격상 필자가 이 글을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준비하다 보니 논리체계나 분석방법 등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내용이 적지 않다. 이는 2007년도 연구주제인 [충남도정의 '창의와 도전의 실천행정' 구축을 위한 연구](충남발전연구원)로 계속될 예정이다.





충남논단 2

II. 민선4기 도정여건 변화와 대응

민선4기 도정여건 변화는 매우 복잡하다. 여기서는 이를 시대적·세계적 차원, 국가적 차원, 그리고 지방적 차원으로 나누어 큰 줄기를 조망해보면서, 이러한 변화구조 속에서 민선4기 도정혁신방향을 시사 받고자 한다(필자 외, 2006, 6: 1-3 참조).

1. 민선4기 도정여건의 변화전망

1) 시대적·세계적 차원의 변화전망

먼저 시대적·세계적 차원의 변화전망이다.

첫째는 최근 국제질서의 개편과 더불어 세계화(지구촌화)로의 가시화에 따른 무국경(borderless)의 무한경쟁체제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상호의존성에 기초한 다원주의 확산과 문화경쟁력 강조 및 특히 세계적 차원의 단일 경제·문화권으로의 편입추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범세계적 지식정보화 강조로 개별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과 경쟁의 '양가적'(兩價的) 공존기반이 확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국가간 상호이익의 갈등·대립으로 테

러위협 등 새로운 안보상황의 다변화 전개 및 비정치적(apolitical) 대결구도의 표면화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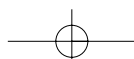
넷째는 인류 생활환경의 악화, 에너지 감량추세, 빈부격차 심화, 폭력성의 확산과 동시에 고급화·다양화(다변화), 웰빙·퓨전추세 및 지역주의 팽배 등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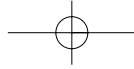
그리하여 각국은 세기(世紀) 초반의 대전환기에서 국제체제 속의 국가역할의 규정에 부심하고 있으며, 이로써 종래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시대 상황에 걸맞는 인식들을 요구하고 있고, 무국경 무한경쟁체제의 가속화로 지구촌 생존조건을 압박하면서 탈이데올로기적 대결의 심화 및 실리위주 국제관계가 구조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지식시대에 대응하는 인식과 실천기반의 전환이 새롭게 모색되면서 헌팅톤이 예견했던 바와 같은 류의 역사순환의 문명충돌과 지식정보사회로의 구체적 편입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표 1〉 시대적·세계적 차원의 변화추세

- 국제질서 개편, 지구촌화, 무국경 무한경쟁체제 심화
 - 다원주의 확산, 문화경쟁력, 단일 경제문화권 편입
 - 범세계 지식정보화, 협력·경쟁의 양면적 공존기반
 - 국가간 상호갈등, 다변화, 비정치적 대결구도 표면화
 - 환경·자원문제, 격차심화, 웰빙·퓨전추세, 패권주의
-
- ❖ 문화-지식시대에 대응하는 인식·실천기반 전환 모색
 - ❖ 세기 초반 대전환기 속에서의 국가역할 재규정 부심





2) 국가적 차원의 변화전망

다음은 국가적 차원의 변화전망이다.

첫째는 참여정부 집권 후반기의 국정운영 자리매김 압중모색 및 '새로운 실세(국회·헌재 등)의 위요(圍繞) 속에 정국안정 대안 염출에 부심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2〉 국가적 차원의 변화추세

- 참여정부 하반기 국정관리 마무리 및 新정치세력화 영향력 강화 속에서 정국안정화 대안 마련 부심
- 정부정책 로드맵(혁신분권/균형발전/행복도시 건설 등) 관련 정책대상집단간 상반된 평가 공존
- 지역/집단간 이익갈등 및 해법찾기 한계 노정으로 참여정부 구현 및 시민사회 역할 재정립 요청
- ❖ 정부/행정혁신 드라이브 관련 사회비용 최소화 모색
- ❖ 사회통합 역량 비축에 국가자원 투입노력 총력 전개

둘째는 정부정책의 로드맵(정부/지역혁신·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정책대상집단들의 상반된 평가가 여전히 공존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계속되는 지역·집단간의 이익갈등과 '해법찾기'의 한계로 참여정부의 구현과 시민사회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문제가 잠복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참여정부 후반기에 '국정운영 로드맵' 유지에 부심할 것이 예상되며, 혁신분권·국가균형발전·행정도시건설 등에 일정부분 제약조건이 잠재화되고 있고, 정부·행정혁신 드라이브에

이은 사회경제 관리부담의 최소화를 도모하면서 사회비용 급증과 안정기반 취약 및 이해대립 표면화 해소에 주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통합을 위한 역량 비축에 각종 국가자원 투입노력의 전개와 대·내외 국가역량 확보 및 국익유지·균형발전을 계속 모색, 시도할 것이 예견된다.

3) 지방적 차원의 변화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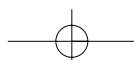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지방적 차원의 변화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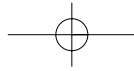
첫째는 지역주의 온존과 다원주의 혼재, 경제여건 불비(不備), 사회갈등 심화, 급증하는 사고발생에 따른 이완된 민심 치유책 모색에 부심한다는 점이다.

둘째, 거둬드는 정치적 이해득실, 균형발전 및 분권·분업·분산 차원의 행정도시 건설, 자치역량 강화와 관련 중부권 역량확대가 모색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도농격차 및 고령화-저출산-양극화 현상 심화, 민생경제의 침체 속 생존력(경쟁력) 확보와 함께 주민참여제도 도입 및 지방자치제 보완 등 자치발전 기대수준이 계속 점고(漸高)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민선4기의 역사적 출범 및 자치행정의 안정기조 희구와 혁신분권의 전초전 경과 후 지방경영체제의 효율화가 강하게 모색되면서, 충남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건설





충남논단 2

에 걸맞는 지역여망 반영 노력 및 그 가시화가 돋보이고 있으며, 특히 행정도시 건설과 신도청 이전 등 숙원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활로를 계속하여 모색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지방선거 실시 후 정가 재편 및 민심 향배에 주목하면서 주민기대 점고에 따른 지역발전 체감지수의 향상 해법찾기에 부심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3〉 지방적 차원의 변화추세

- 지역주의 온존, 경제불황, 사회갈등 심화, 사건/사고 급증에 따른 이완된 민심 치유책 모색에 부심
- 지역간 협력/대결구도 표면화, 분권/분업/분산 차원의 균형발전 및 행복도시, 자치역량 확보 예로
- 도농격차, 고령화-저출산-양극화, 민생문제 속의 환로 모색, 주민참여제 및 자치제 보완 등 기대수준 압박
- ❖ 민선4기의 역사적 출범, 자치행정의 안정기조 회귀
- ❖ '강한 충남 건설'에 부응하는 지역여망(행복도시/신도청) 반영 및 가시화, 지역발전 체감지수 향상, 대응책 모색

2. 민선4기 도정혁신의 대응양식

1)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구현의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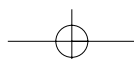
작지만 강한 정부'를 상정해 볼 때,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구현의 성립조건에 한 단계 더 접근할 수 있다. 이는 후쿠야마 교수 저작인 [강한 국가의 조건](2005)을 통해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적절히 시사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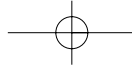
첫째는 '맞춤형' 조직설계 및 관리(행정관료제 부문)이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대대적인 행정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내년(2007)부터 총액 인건비제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정의 목표에 따라 행정조직이 합목적적으로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자질과 역량에 핵심을 둔 조직의 재설계와 이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둘째는 '참여 가능한' 충남도정의 설계(정치제도 부문)이다. 지방자치는 일방적인 행정중심의 체제가 아니다. 도민의 참여를 높이는 일은 요원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참 뜻을 이루어 내는 과제로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의 멈추지 않는 충남의 성장엔진의 단초가 될 것이다.

셋째는 도민이 원하는 충남이다.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은 도민이 원할 때만 실현 가능하다. 이는 도민의 요구를 전적으로 혹은 최대한으로 수용한다는 의미이며, 도민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도정에 투입한다는 좁은 의미가 아니다. 보다 거시적으로 충남의 비전에 200만 도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대한 기반을 만드는 작업이며, 민선4기 도정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업인 것이다.

넷째는 '충남다운' 문화·구조의 형성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그리고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방적으로 행동하라'(globally think, locally act)라는 말처럼 이는 정치·경





제·사회·문화에 있어 점점 그 경계선이 희미해지는 세계화 추세에 자신의 것을 내부적으로 강화시키는 자기강화(self-reinforcement)가 그 핵심이다. 충남을 보고 각종 형식적인 표현들이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모토는 가장 '충남다운 충남'의 정체성을 찾자는 것이며, 이는 충남발전을 새롭게 도모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필자, 1999, 12)..

이와 같이 조건 지워지고 형성된 충남은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근시안적인 도정이 아닌 백년대계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으로 재출발시켜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²⁾

2)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구현의 조건과 방법

그렇다면,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만들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우선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은 도민이 원할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구현을 위한 조건들

• '맞춤형' 조직설계·관리(행정부문)

• '참여가능한' 도정설계(참여부문)

• '도민들이 원하는 도정'(수요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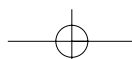
• '충남다운' 문화구조(정체성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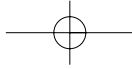


후쿠야마 “강한 국가의 조건” (2005) 원용

〈그림 2〉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구현을 위한 기본조건들

2) 일단 필자는 왜 '강한 충남'인가?에 대하여 기회, 자원, 전략, 사람, 힘을 생각했고, 어떻게 하면 '강한 충남'을 이룩할 수 있나? 에 대하여 의지+실천력(실질), 경쟁력(선택과 집중), 책임감(책임완수), 무한봉사(고객만족), 성과(결과), 거버넌스 등을 짚어보았다.





충남논단 2

때 만들어진다. 모든 변화와 힘은 그 필요성과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내부 수요가 불충분하면 그곳에 도달할 정치·행정적 수단이 강구될 수 없다. 이는 외부의 지원이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즉, 충남 자체의 힘과 역량을 강화 내지는 활성화시키지 않고 외부의 자원을 도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단지 외부에서 해결해야 할 일은 단기적인 안정성을 공급하는 일에서 멈추어야 하며, 이후 충남 스스로 지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자립적인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국가운영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법적으로는 '자치'라 하고 있지만, 이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지배형태가 엄존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세력이 제공하는 모든 지배가 과도기적이며 이에 단순히 응하는 모습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정부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은 어떤 지방정부에 대한 침해를 어떤 근거로 누가 결정하느냐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충남은 이러한 논의에 있어 상당히 소외된 지위에 있었다. 이 점은 앞으로 우리 충남이 가야할 길을 극명하게 보여준다.³⁾

이제 충남은 자체의 힘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

에 다달았다. 아니 그러한 시점을 이미 넘었다고 해야 옳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역량을 확보하고 충남의 자원을 다듬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민선4기 충남도정에서는 충남의 미래비전에 적합한 정책수단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강구하는 부단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이로써 충남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거듭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힘을 비축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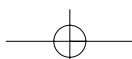
Ⅲ. 도정혁신의 방향 : '창의와 도전의 실천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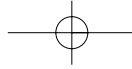
1. 기본입장

1) 합리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

앞서 언급했지만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이 되기 위한 필수요소로서 '합리성'과 '경쟁력'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민선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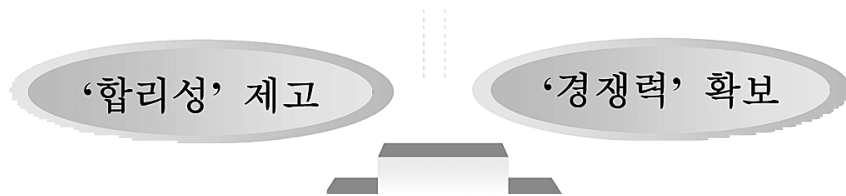
3) 문제는 수도권 지역과 같이 막강한 정치력에 막대한 자원동원력을 갖춘 경우와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지방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충청권은 지역의 역량이 취약한 지역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정에서 반대 움직임이 아직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으며, 이를 충청권에서 정치력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





기 충남도정 운영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요체라 할 수 있다.

❖ ‘그동안 ‘합리=순리’, 재난/재앙 없이 溫厚之情, 유순, 포용 ⇒ 극단배제, 중도적 사고, 자기결정력/상황대처력/도전정신 미흡, 정치적 기반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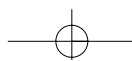
❖ 實事求是의 ‘합리적 사고’로 전환, 명쾌한 논리, 자기결정성/자기책임성 강화, 務實力行, 상생과 협력, 분별력 강조 ⇒ “창의와 도전의 실천행정”

〈그림 3〉 창의와 도전의 실천행정의 주요안점

먼저 '합리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충남사람(충청인)이 '합리적'인가? 여기서 '합리'란 이치에 부합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고래로 충청인은 국토의 중간지대에서 큰 재난·재앙을 겪지 않고 '온후지정'(溫厚之情) 해오면서 포용력과 너그름, 그리고 가능한 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래서 충청인의 기질·정서의 기저에는 서구적인 개념인 합리성(rationality)이 곧 '하늘(자연)의 뜻(이치)에 부합한다'는 의미의 '상응성'(相應性; correspondency)으로 자연스럽게 인식되어 왔다(필자c, 2006. 9).

그런데 그 결과는, 오늘날 '유약한(弱體) 충남'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소이연(所以然)은 '힘(정치적 힘)'이 없기 때문에, 충남이 중앙무대에서 늘상 변방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로 반증된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그 해법은 오랫동안 가꾸어 온 충청인의 기본정서의 골격은 유지하되(좋은 점은 살리되), 우유부단하고 애매한 '중도적 사고'는 과감히 버려야 하며, 주장할 것은 적확(的確)한 논리개발을 통하여 당당하고 설득력 있게(명쾌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분별





충남논단 2

지(分別智; prudence)를 강화해야만 한다.

사실 충청인의 사고체계(의식세계)는 일반적 상황에서 '경우'를 중시한다. 그러나 정작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며, 또 공식적인 일이라면 크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동시에 사람(충남사람; 충청인)을 키우는 일에 크게 소홀하여 결과적으로 힘이 없는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지역이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필자, 1977 : 49-53).

2) 창 의와 도전의 실천행정'의 대두

그러므로 앞으로 민선4기 충남도정은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해 최대의 성과를 구하려는 현실감 있는 기질로 조속히 탈바꿈되지 않으면, 이 험한 세파를 헤쳐나갈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행정 내부적으로는 무실역행(務實力行)이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실은 분명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좋은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이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지도계층과 공직자들의 '헌신적 노력' 마음과 몸을 한껏 던지는 이 요체이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경쟁력은 분명 확보될 수 있다. 그런즉 '창의와 도전의 실천행정'은 바로 이를 두고 강조되는 도정이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실천행정'은 보통의 '실천'(practice)일 수도 있고, 모순적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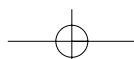
'(praxis)일 수도 있다. 어쨌든 '창의'와 '도전'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위해 의식·태도(行態)와 함께 시스템(제도)을 탈바꿈시킬 것을 요구한다. 사실 '의식'이냐?(ex. 신바람), '제도'냐?(ex. 시스템)는 양자택일 대상이 아니며, 다만 그 우선순위가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실천행정은 의식변화는 물론 제도변화를 포괄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에서 충청인의 기질·정서와 관련하여 정체성과 분별력, 그리고 합리성과 경쟁력을 말했던 소이연이 바로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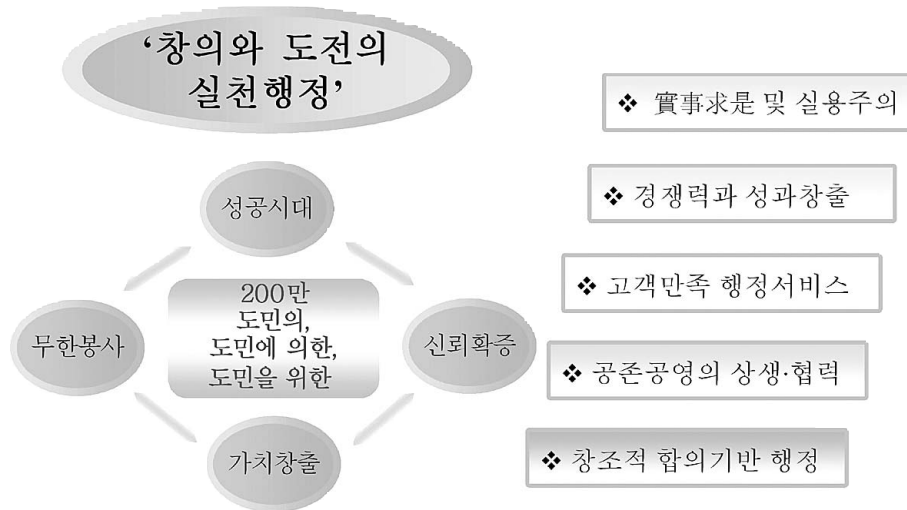
이러한 실천행정의 결과는 곧 '마땅한 성과'와 함께 '강력한 신뢰'를 수반할 것이다. 말로만 하는 행정, 구호성·전시성의 행정, 책상머리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은 이제 모두 거두어야 한다. 발로 뛰는 행정, 주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행정("백성의 목소리는 곧 신의 음성"), 현장을 중시하는 행정이 민선4기 충남도정에서 진정 지향해야 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2. 지향가치

1) 도정혁신의 추진중점 1

이른바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을 위한 민선4기 도정혁신의 중점을 '창의와 도전의 실천행정'으로 상정해 볼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도정혁신 추진중점을 짚어보아야 한다.





〈그림 4〉 '창의와 도전의 실천행정'의 추진중점

첫째는 '성공시대'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는 200만 도민의 성공시대를 여는 충청남도로서, 도민의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충남을 구현한다는 의미가 된다.

둘째는 '무한봉사'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는 200만 도민을 섬기는 충남도정이며, 주민을 행정의 주인으로 섬기는 서비스 위주의 행정을 말한다.

셋째는 '가치창출'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는 도민의 행복을 일구어가는 초일류 충청남도로서, 도민의 행복을 약속하는 영광의 충남시대 창조를 지향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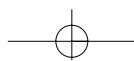
넷째는 '신뢰확증'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충남도로서 도민의 행복과 성공을 약속하는 충남도정을 지향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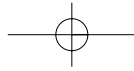
2) 도정혁신의 추진중점 2

이와 같이 행정의 자세(과정)+행정의 결과(지향가치)를 결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민선4기 도정혁신을 위한 추진중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실사구시(知行合一) 및 실용주의 행정에 초점을 둔 강한 책임감(책무의식), '창조적 실천', 과정적 낙관론(최선주의)를 토대로 창조적 실천행정을 말할 수 있다.

둘째는 경쟁력과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둔 전략적 지방경영(자치경영), 중핵 성장엔진 주력, '실질(적) 행정', 그리고 '자원+환경' 및 '목표+수단'의 통합관리로 삶의 질 환류를 통한 초일류·성





충남논단 2

과지향 행정을 말할 수 있다.

셋째는 고객만족 및 고객감동에 중점을 두고 도민(주민)은 행정(도정)의 '주인', 공무원은 '공복'(公僕)(그러나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무한봉사로 발로 뛰는 행정서비스와 '고객감동(수단) 가치창출(결과)'을 말할 수 있다.

넷째는 복지에 중점을 두고 행정의 궁극적 목적이 복지에 있음을 천명하고, 공존공영의 상생사회, 도민이 '편안한' 사회, 보살피는 행정, 소외(약자)계층을 아우르는 행정으로서 공존공영의 상생행정을 말할 수 있다.

다섯째는 거버넌스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합의 기반, 다양한 이해조정(갈등해소), 목표통합(정책통합)을 통한 '창조적 합의'를 이루는 행정을 말할 수 있다.⁵⁾

이와 같은 요소들을 적절히 통합하여 '창의와 도전의 실천행정'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5) 그동안 지방정부들이 앞다투어 행정혁신을 추진해 왔으나 행정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특성이나 요구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여 실패한 경우가 왕왕 있었다. 그래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행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 문제태결에 있어 사전조율과 협의, 역할분담과 책임, 갈등조정과 합의가 상대적으로 경시되었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선호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제 지방정부는 각종 지역발전사업을 위한 문제와 과제에 대한 거버넌스 차원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결과적으로는 공공부문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와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창출해야 한다. 이것이 참여행정이고 학습과정이며,共生산이라 할 수 있다.

IV. '창의와 도전의 실천행정'을 위한 전략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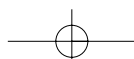
앞으로 민선4기 도정혁신을 실효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서 강조한 '창의와 도전의 실천행정'에 입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각 분야별로 주요 도정혁신과제를 설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운영해야 할 것이 요청된다. 여기서는 다만 각 분야별 주요과제들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음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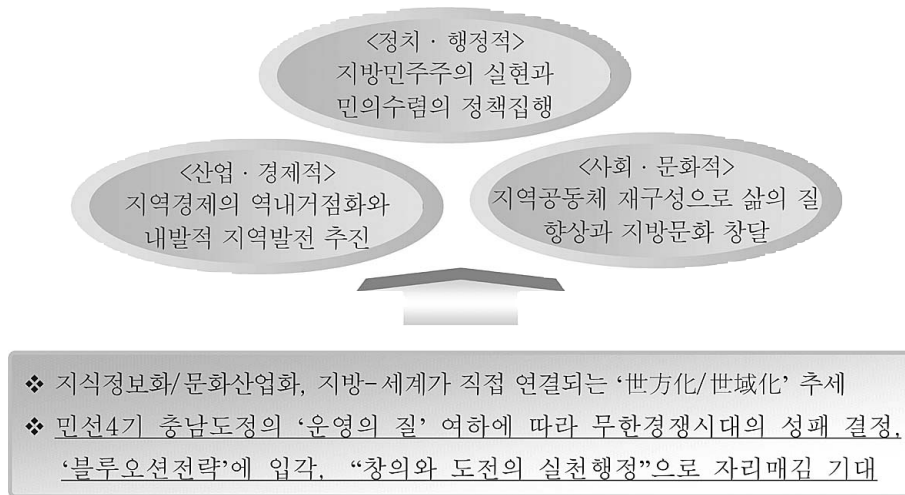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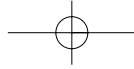
1. 의의

지난 1995년 6.27 지방선거 이후 민선자치체제의 등장이래 금번 민선4기 충남도정의 출범은 명실공히 민선지방자치의 성숙단계로 본궤도 진입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것이 담고 있는 의의는 매우 지대하다(필자, 1996. 9 : 2-4).

이를 큰 틀로 보았을 때, 정치·행정적으로는 지방민주주의 실현과 민의수렴의 정책집행 수행, 산업·경제적으로는 지역경제의 역내거점화 및 내발적 지역발전(inward development) 추진, 사회·문화적으로는 지역공동체 재구성으로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지방문화(local culture)의 창달 등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민선4기 충남도정에는 어떠한 변화가 요구되는가? 현단계는 지방이 세계로 직접 연결되는





〈그림 5〉 창의와 도전의 실천 행정의 기본방향

지식정보화사회 개막과 함께 밖에서의 경쟁과 안에서 경쟁 양상이 혼합·혼재하는 '세방화'(glocalization)·'세역화'(global regionalization)의 물결이 넘나드는 전환기임에 틀림없다.

이제 민선4기 충청도정은 과거의 중앙집권 때와는 다른 제도와 다른 여건 속에서 생산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펼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할 것이다.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은, 민선4기 충청도정의 '운영의 질' 여하에 따라 충남의 성장잠재력이나 발전가능성이 판가름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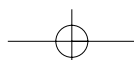
그렇다면 민선4기 충청도정의 성패를 가름하는 '운영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과연 무엇인가를 곰곰이 숙고해 봐야 한다. 이는 주민 위주의 봉사행정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삶의 질 향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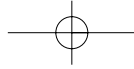
강조할 수 있고, 지역경쟁력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영을 강조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역동적인 지역경제 역량의 확충은 필수적이다.

2. 주요분야별 도정책신의 전략과 과제

1) 행정·정책분야

여기에서는 체감형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수요자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대고객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도정의 적극적인 홍보 및 공개와 주민참여를 통한 도민의 자치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블루오션전략"에 입각한 정책개발을 추진한다.





충남논단 2

〈표 4〉 행정·정책분야 도정혁신의 중점

- 체감형 고객만족/감동, 알권리-알릴 의무, 미래수요 대응, 의정협력지원, 성과관리, 재정효율화, 평가시스템, 교육훈련/연구개발, 지역협력 강화
- ❖ 예측가능한 행정, '자치거버넌스'를 위한 도/시·군 정책통합형 운영체제

미래 행정수요에 부응한 조직체계 개선을 위해 지방분권 정책에 부응하고 미래도정의 행정수요를 고려한 조직체계를 적극 모색하며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고 경영행정에 부합하기 위한 조직운영방안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자체평가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도정운영의 성과향상과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성과관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며, 도정의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인사교류를 통한 자치단체간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기반 조성으로 인사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창의적인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이를 생활화시킬 필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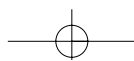
2) 문화·관광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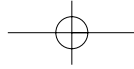
개성 있는 지역문화권을 형성하고 문화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존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 밀착형 문화공간 조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기회를 부여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활동 촉진을 위한 고품격 문화인프라 구축과 적극적인 문화 마케팅을 전개하고 충남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문화소재의 발굴과 문화콘텐츠화를 통한 지식문화산업 기반을 구축한다. 안정되고 특성 있는 관광기반과 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권역별로 자원과 성향에 따라 특화개발을 추진하며 충남 내륙의 관광거점도시와 국제적 관광전략지역을 조성하고 역사문화권과 서해안을 연계하는 해양·역사문화거점관광

〈표 5〉 문화·관광분야 도정혁신의 중점

- 개성있는 지역문화권,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고부가치화, 문화마케팅, 내륙-해양 연계관광, 관광수요 대응 교류콘텐츠, 머물러가는 프로그램
- ❖ 백제/내포/금강권 문화산업화, 교류 중심 관광, 국제형 관광기획 상품





도시를 육성한다.

한편, 거점 연계형 관광명소를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며, 이와 함께 테마형 광역적 관광벨트를 구축한다. 현대 관광수요에 적합한 문화콘텐츠 상품의 제공과 시·군간 협력사업을 통한 관광마케팅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3) 복지·여성분야

아동복지 및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및 장애우의 사회참여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예방적·생산적 복지서비스 기반을 조성한다.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의 민영화 확대 및 지역사회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지역간 의료격차 수준을 해소하고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의료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의료체계 및 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도록 한다.

주거복지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령화와 저소득층 가구의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며 다양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전략을 통합하고 연계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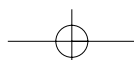
〈표 6〉 복지·여성분야 도정혁신의 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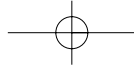
-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대응프로그램 모색, 자활/자조/자립형 지역복지, 자원봉사 활성화, 양성평등, 여성이 행복한 사회, 의료/주거의 질 향상
- ❖ 행정의 목적은 복지,孝사상 집목, 능력/활력 있는 여성 육성, 가정평화

4) 산업·경제분야

산업 및 기술의 경쟁력 강화라는 기치 아래 농업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화시켜 살고 싶은 농촌, 활력 있는 농촌을 지향하고 산림자원의 생태적,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며 환경친화적이며 시장지향적인 축산업 육성과 해양관광과 미래형 수산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충남을 권역별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4대 전략산업의 집적추진과 이를 광역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산업의 혁신클러스터화를 추진한다. 또한 미래지향형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산업의 지식기반화 추진과 함께 지식기반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21세기 친환경적 산업환경을 확고히 조성한다.





충남논단 2

〈표 7〉 산업·경제분야 도정혁신의 중점

- 특화산업 클러스터, 농어촌 활력화, 유통구조 개선, 고용촉진, 중소기업육성, 일자리 창출, 산학연, 제재시장/지연산업 육성, 노사안정, 지식산업화
- ❖ 지역경제기반 고도화, 기존산업/첨단산업간 균형유지, 수출역량 확대

지역내 산업지대간 생산, R&D, 마케팅, 인적 자원 등 통합적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전문 인적자원시스템과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제조업 지원 관련 비즈니스 서비스업을 확충하고 지식서비스산업의 전략산업화와 지원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지역내 지식 기반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전국상권을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유통서비스업과 자금의 효율적 중개 및 배분을 통한 지역금융을 활성화한다.

5) 환경·생태분야

충청남도는 항상 건강하고 생태적으로 안정한 물환경을 조성하고 생물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공간을 창출하며 도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환경정책과 국제 환경관리의 표준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상을 정립함으로써 도민이 쾌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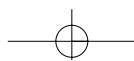
고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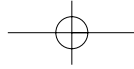
이를 위하여, 도민의 건강과 생태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여 물환경 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환경정의를 실현하고 유역중심의 미래 지향적 물환경관리 체제를 구축하며 물의 이용과 관리를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제도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여 환경부하를 경감시키고 발생된 폐기물을 철저히 에너지 및 자원회수시설을 통해 자원으로 회수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안전한 처분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대기질과 지역경제 정책의 조화로 생태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도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대기환경정책을 시행한다. 국제 환경관리의 표준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도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을 보장한다.

〈표 8〉 환경·생태분야 도정혁신의 중점

- 인간과 자연의 공존시스템, 참여적 환경관리, 생태네트워크, 수(물)환경, 폐기물 감량, 산-들-강-연안 통합운영, 자원재활용, 환경 국제표준화
- ❖ 생태적 안정성 유지, 맑고 푸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개선 노력





〈표 9〉 지역개발분야 도정혁신의 중점

- 지역균형발전, 도내 1시간권, 도농격차 해소, 도시별 기능특화, 참여적 지역개발, 민원 사전예방, 토지이용 합리화, SOC 확충, 국공유지 관리
- ❖ 행복도시/신도청 발전축, 낙후지역 대안개발, 계획적/참여적 지역개발

6) 지역개발분야

충남의 발전방향과 전략산업을 강화하고, 여건 변화 및 지역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시·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문기능도시로 육성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국제교류 및 도농교류를 확대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신도청소재지, 기업도시 등 신도시 개발 및 연계지역을 중심으로 혁신거점을 형성하고 주변도시가 긴밀히 연계된 광역적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한다.

중소도시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과 문화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국공유지를 정비한다. 도시계획 및 개발과정에 주민, 시민단체, 행정기관간 협력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 도 및 시·군 차원에서의 주민참

여 확대를 위한 각종 조례 및 시책을 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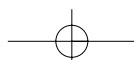
농촌의 복합생활공간화를 위해 중심도시와 배후 농촌지역을 하나로 묶는 통합생활권으로 재편하며 농촌의 활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도농복합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공간위계에 따라 농산어촌 정비방향을 달리하여 정주기반을 확립토록 한다.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유희농지와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산발적인 난개발 방지를 위한 농촌토지이용 조정제도를 도입한다.

7) 소방·방재분야

그동안의 안전투자 소홀, 사후대책에 급급, 학습부재 심화를 극복하기 위해 '안전한 충남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것의 시·군 확산의

〈표 10〉 소방·방재분야 도정혁신의 중점

- 재난/재해 예방관리, 지역/도시 통합안전관리, 교통안전-학교안전 연계, 소방력 확충, 안전연구/교육 강화, 안전평가 및 국제안전도시 지정지원,
- ❖ “안전한 충남 만들기” 역점 추진으로 200만 도민의 생활안전 확보





충남논단 2

본격화는 물론, 특히 경찰청의 교통안전, 교육청의 학교안전, 그리고 각종 안전 유관단체를 연계한 [안전거버넌스] 구축, 충청남도 지역·도시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추진, 그리고 시·군 안전관리 종합평가 실시를 통한 우수 시·군을 대상으로 안전도시(Safe Community) 지정 국제공인사업을 역점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예방 안전도 지수, 안전지도(Safe Map) 개발 및 시·군 확산, 신종재난과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안전대책 수립 및 도민 E-30분 대피시스템을 구축하고, 풍수해 사회보험제도 및 지역별 풍수해 저감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특히, 충남 119종합안전정보센터와 도민생활안전체험장을 설치, 운영하며, 고령화에 대비한 교통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어린이, 학생 스쿨존 등 학교안전시스템 확립은 물론, 계룡시와 계룡대간, 논산시와 연무대간 재난관리 민·군 공조시스템을 시범적으로 통합구축하며, 도내 안전관리 각종 유관단체 안전정보 DB 구축 및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한다.

V. 결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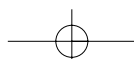
"창의적 과제를 수행하다 실패한 공무원에게는 오히려 상을 주겠다." 이는 최근 산림청이 '산림정책 실수·실패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면서, 각 부서별로 모두 37건의 사례를 모은 뒤 10건의 '우수 및 실패사례'를 발표토록 했던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단순히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실패관리'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산림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⁵⁾

이제는 지방행정에 대한 경영화 요구(경영수의 창출) 증대, 무한책임이 요구되는 책임운영체제 대두, 새로운 차원에서 지방정책(local policy)의 중요성 부각이라는 측면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블루오션전략'의 개발 및 채택이 중요하다(김위찬·르네 마보안, 2005). 특히 무엇보다도 지방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지방에서 성공하는 인재의 육성은 민선4기 충남도정의 중요한 과업이 아닐 수 없다(필자a, 2006, 4: 183-185).⁶⁾

최근 경쟁이 가열화되어 상대방과 차별화를 위해 투쟁하며, 경쟁우위를 위해서 서로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을 '레드오션(Red Ocean; 붉은 바다)'로 규정하는데 반하여, 경쟁에 대해 벤치마킹

5) 한편 산림청은 앞으로 성과평가에서 쉬운 지표를 무난히 달성하는 것보다는 비록 실패했다라도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과제를 우대하고, '올해의 도전왕도' 선발하여 포상할 계획을 전했다.

6) 이는 근간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다. 유럽경영대학원(INSEAD) 교수 김위찬·르네 마보안 공저 강해구 역(2005), [블루오션전략: 성공을 위한 미래전략] (서울: 교보문고), pp vi-vii.





충청남도 도정책신의 방향과 과제

종래의 “레드오션”에서 이제는 “블루오션”으로 시각전환, 싸우지 않고 이기는 무한대의 고부가가치 선점, 확보를 위한 ‘自治智略’



김위찬 · 르네 마보안
“블루오션전략” (2005)

〈그림 6〉 '自治智略'으로사의 블루오션 전략

하는 대신에 자신만의 법칙을 세우고 경쟁없는 시장공간을 창조하며, 전략적 사고를 바꾸고 구조적 접근법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시장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을 '블루오션전략'(Blue Ocean Strategy; 푸른 바다)으로 간주하는 시도가 있어 주목을 끈다.

즉, 레드오션전략이 경쟁을 목표로 하며, 존재하는 소비자와 현존하는 수요에 초점을 맞춘다면, 블루오션전략은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비고객에게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거나 포착한다.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붉은 바다'에서 경쟁하는 방법에만 전력했다면, 이제부터는 '푸른 바다'를 체계적으로 포착하는 전략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시대의 지방정부 정책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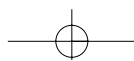
그런즉, 민선 4기 충남도정의 비전(도정기치)을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과 '창의와 도전의 실천행정'에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가치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수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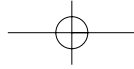
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최근들어 '혁신'과 '거버넌스'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 지역혁신, 정부혁신, 혁신분권 그리고 지방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 지역발전 거버넌스 등등의 용어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사실 정부를 비롯하여 기업과 대학에 이르기까지 '혁신'을 이루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특히 행정에서 추구하려는 혁신은 상당한 자기변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혁신과 거버넌스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특히 행정혁신의 바탕에는 어떤 요소가 자리잡고 있는가?

이는 행정이 스스로 변모하지 않으면 경쟁체제 속에서 더 이상 생존이 어렵고 경쟁력을 갖출 수 없으며, 따라서 행정내부의 혁신은 행정외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기본전제에 입각한다.

한편으로 '시스템적 사고'란 자신과 전체를 연관시켜 생각하고, 일이 단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된다는 환류(피드백)을 강조하는 사고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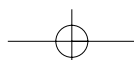
충남논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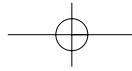
그렇다면 국가발전이나 지역발전에 있어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과 함께 우리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은 필수적이다. 문제를 잘못 진단하여 적절치 못한 처방을 내리게 된다면, 그 결과는 분명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무리 중간과정을 열심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풀어갔다 해도 기본전제가 잘못되었다면, 당연지사 그 결과는 오류를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⁷⁾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학습부재를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몇몇 케이스를 예시해 본 것은 성공사례이든, 실패사례이든 간에 우리가 분명히 배울 것이 있기 때문이며, 각자 처해진 상황과 여건은 다르지만 공동목표를 위해 힘과 지혜를 합쳐야 한다는 것, 그러나 와중에 겪는 어려움은 소기의 성과의 재배분을 통해 꼭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역의 주요현안을 분별력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충청남도의 도정혁신에서 꼭 강조되어야 할 것은, 지방정부를 위기, 난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분별력 있게 이끌어가는 위기관리 리더십이며, 아울러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마련, 구축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다.

7) 이는 마치 와이셔츠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나머지 단추들을 아무리 일정한 간격으로 꿰어도 옷 전체가 뒤틀리게 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제3종 오류(the third-type error)를 크게 경계치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충청남도 도정혁신의 방향과 과제

참고 문헌

- 김용교 (2001), "지방정부의 정책능력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김위찬·르네 마보안 공저, 강해구 역(2005), [성공을 위한 미래전략, 브루오션전략], 서울: 교보문고,
 박상돈 (1998), "지식행정과 新빠꿈이 양성론," [열린충남], 제4권 4호, 충남발전연구원.
 박영주 (2000), "뉴거버넌스와 사회계약: 시민, 정부, 시간의 역할과 책임의 모색," [한국행정정보], 제34권 4호, 한국행정학회.
 육동일 (2006. 7), "민선4기 충남도정의 과제 자치행정분야," [열린충남], 제35권, 충남발전연구원.
 이경용 외 (2002),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와 조직몰입," [한국사회학], 제36권 3호, 한국사회학회.
 필자(1997. 11), [인본·경영행정의 기본이념과 구현전략: 자치충남도정의 기본원리], 충청남도.
 필자(1999. 12), [21C 新지방문화 창조를 위한 충남도정의 정책방향],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정예공무원반 교육교재.
 필자(2005. 9), [충남도정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한 2006년 도정여건·방향 및 역점시책(안)], 현안과제 연구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
 필자(2006. 4), [지역정책개발 방법론: 정책혁신 및 정책마인드 형성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5급 특별교육과정 교육교재.
 필자(2006. 8),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을 위한 민선4기 도정혁신의 방향," 2006년도 하반기 혁신분권연구단 워크숍, 충청남도·충청남도혁신분권 연구단.
 필자(2006. 9), [충남정신과 도정이념],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교재.
 필자 외(2006. 6), [국내 외 여건분석을 통한 민선4기 도정정책방향과 역점시책 연구], 현안과제 연구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
 한세익 (2001), "연성적 행정구조의 기능의 탐색: 지식네트워크의 관점,"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행정학회.
 細川護熙·岩國哲人, 김재환 역(1991), [지방의 논리], 서울: 민지사.
 岩國哲人, 정재길 역(1992), [지방의 도전: 시골 뭇을 되찾는 길], 서울: 삶과 꿈.
 Levin Martin A and Sanger, Mary Bryna, 이연호·김선빈 공역(1996), [선진행정의 길: 공공적 책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행정],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Bounds, G. et al. (1994) Beyond Total Quality Management: Toward the Emerging Paradigm, New York: McGraw-Hill.
 Harrop, M. and Miller, W. L. (1978), Elections and Voters, London: Macmillan Co.
 Martilla, John A. and James, John C. (199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January.
 Peters, Thomas J. and Waterman, Robert H. (1984), In Search of Excellence, New York: Harper & Row, Pub. Inc.
 P. Kotler and G. Armstrong (1999), Principles of Marketing, 8th ed., Prentice-Hall.
 Osborne, David and Gaebler, Ted (1992), Reinventing Government: How the Entrepreneurial Spirit is Transforming the Public Sector, New York: A Plume Book.
 Stewart, S. (1988), Understanding the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Essex: Longman.
 Sethi, J. N., Mittal, B. and Newman, B. I. (1999), Customer Behavior, Dryden.

